

충남 어업인인권 실태와 과제

김종화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 어업인 수는 약 147,300명으로 국내인구 비중의 약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충남 또한 21,375명으로 약 1%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어업과 수산업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직업군으로서의 어업인의 사회적 지위도 약화시키고 있다. 또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져 그들이 누려야 할 삶의 질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삶의 질은 곧 어업인의 권리이며, 이는 어촌에 거주하고 어업을 직업으로 하는 이들의 인권이 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어업인인권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실태를 파악하였다.

어업인인권 항목

어업인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1)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 2)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이 요구된다.

1)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

어업인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① 정주여건 및 접근성이 있다. 어업인의 정주여건 보장은 어업인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괘적한 환경에서 정주할 권리를 갖고 있다. 또한 낙후된 교통과 통신망에 의한 이동권과 정보접근권의 제약을 받고 있다. ② 사회적 갈등이다. 행정과 어업인간의 갈등, 어업인과 인근시설간의 갈등, 어장을 둘러싼 어업인간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산재해 있다. ③ 인권교육 및 정책의 부재이다. 어업인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인권교육의 부재, 인권과 관련된 정책이 미비하다.

2) 실질적 기본권

어업인의 실질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① 주거권과 건강권이다. 어촌에는 주택과 기반시설이 낙후되었고, 의료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하다. ② 교육 및 문화 · 예술 · 체육 · 여가이다. 어촌 아이들이 충분한 교육혜택을 누릴 수 없고, 주민들이 문화 · 예술 · 체

특집7 _ 인권으로 행복한 충남

육·여기에 소외되고 있다. ③ 열악한 근로환경이다. 어업인은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소득, 열악하고 거친 근로환경에 처해 있다. ④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이다. 어촌의 다문화 가정, 여성 어업인에 대한 배려가 충분치 못하다.

어업인인권의 실태

인권항목별로 충청남도 어업인은 인권적 측면에서 갖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1) 사회적 기반

어업인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반사항을 제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①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고립성을 갖고 있다. 어촌의 주택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 지리적 특성에 따른 이동성, 접근성의 제약이 발생한다. 어업인의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기반정비사업 등과 같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또 주민들의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다양한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② 사법 및 행정절차상의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어업인은 행정당국과의 마찰, 농업인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소외감을 갖고 있다. 어로행위 단속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집행상의 마찰, 어업권 취득과 어로활동 상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마찰에서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지원과 비교하여 어업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느끼고 있다. ③ 다양한 유형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어업인은 인근지역 시설과의 갈등, 해상사고, 어장을 둘러싼 경쟁구도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나 여건이 부족하여 어업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④ 인권교육과 인권정책이 부족하다.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어업분야의 모든 주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이 부재하다.

2) 실질적 기본권

어업인의 실질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개선되어야 한다. ① 주거권이 제한적이고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어촌에는 고령인들이 많으나,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 주거공간은 부족하다. 또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혜택도 충분하지 못하다. ②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주민들의 문화·예술·체육·여가시설이 부족하다. 어촌 아이들을 위한 쉼터, 놀이터, 방과 후 교육 등이 부족하여 보호받을 권리, 놀 권리, 배울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 도시와 비교하여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여가에 대한 시설 및 프로그램도 부재하다. ③ 노동강도에 비하여 소득이 낮고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거칠고 생명이 위협적인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높지 않다. 그리고 어업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도시근로자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④ 어촌의 다문화가정과 여성 어업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부족하다. 이제는 쉽게 볼 수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 그리고 여성 어업인의 인권신장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결론

충남 어업인 인권증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어업인 인권에 대한 의식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어업인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인권을 교육을 통하여 인지시키고 실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어업인 본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어업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오지 어촌의 의료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료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어촌이탈 주민을 예방하고 어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

향후 어업·어촌의 핵심 키워드는 “지속가능성”이 될 것이다. 자원이 감소하고 수입수산물이 증가하고, 어업경영수지의 적자가 심화될수록 어촌이탈주민은 증가하고 어업종사자들은 점점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어업·수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수산물 식량주권의 상실을 초래할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업과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그것의 첫 걸음은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인권증진일 것이다.

